

한동훈, '유능한 與' 강조... 이재명, 일관된 민생·경제행보

한동훈 '우상향 성장 통한 복지' 탄력
금주 민생경제특위 본격 가동
효과 지켜보아야... 野와 소통 '지적'

이재명, 경총·개인 투자자 만나 논의
진보적 이슈에 손 떼... 우려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개혁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의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 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지는 세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 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총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

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사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檢 독재정권·무속인이 미는尹 정권
특검법 처리·국회 국정조사 촉구"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흑사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과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수출"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 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李 "韓 디스커버리 제도로 中企 기술보호"

중소 기술침해, 기업 생존 직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

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방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박태홍 기자